

##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을 앞둔 문예진흥원의 지원사업 구조 개편방안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culture | art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선결되었을 때,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지원방법에서의 해묵은 대립, 즉 소액다건이 좋은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좋은가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지원대상의 세분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예진흥원 지원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

문예진흥원 지원사업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지원사업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요소 - 기관의 미션과 중장기적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기관의 미션은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중장기적 목표는 사업의 범주 구분을 결정한다.

이외에 재원의 성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예진흥원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복권기금 사업은 대부분 복지적 성격이 강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진흥기금과 구조적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복권기금으로 유니베르시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복권기금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원의 성격을 구조적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권기금을 지원사업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은 유보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복권기금의 일정한 비율을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제조건이 확보된다면 재원의 성격에 따라 지원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문예진흥기금은 창작 분야로, 복권기금은 매개와 향수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나눌 경우 각 기금의 본래 성격에 맞는 지원사업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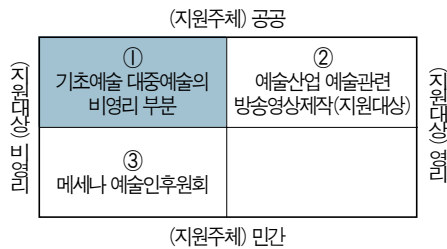
### 사업의 범위

우선 문예진흥원의 미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미션을 명문화하는 것처럼 어렵고도 쉬운 일은 없다. 미션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대충, 포괄적으로, 좋은 말들로 규정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의 미션이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 지원사업 전체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션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구들 간의 상호관계와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되어야만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예진흥원을 포지셔닝하는 데 중요한 기관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원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 장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장은 문화예술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개념의 모호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기초예술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순수예술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대체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초예술만 강조할 경우 새로운 장르나 복합장르에 대한 고려,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문화의 다양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예술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 하에 장을 지원주체와 지원대상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그려지며 여기에서 문예진흥원은 일차적으로 공공/비영리 영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그림-1〉 지원주체와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영역의 구분

### 1) 공공·비영리 영역

이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지원기관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국과 예술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국(과)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다.

이중에서 가장 영역이 겹치는 기관은 예술교육과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다. 별도 기금을 갖고 있지 않고 국고와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재원 면에서는 겹치지 않지만 지원대상을 창조, 매개, 향수의 프로세스로 나누어볼 때 영역이 겹친다. 문화예술교육과가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

를 학교·사회, 창작자·매개자·향수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과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어서 이쪽은 향수, 이쪽은 교육이라고 선을 긋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교육진흥원은 매개자 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문화예술연수원'의 분리와 소관 부서 이관이 거론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문화정책과의 문화복지사업, 기획총괄담당관실의 여성문화사업이 있다. 특히 복권기금이 들어오면서 문화복지사업은 점차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특화되어 나가고 있으며 여가정책과 맞물리면서 확대되어 나갈 추세이다.

문예진흥원은 이들과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차별성을 사업목적이 아니라 누가 하느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여성문화사업 등은 지원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단체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거주지역이나 활동지역에 관계없이 수월성을 갖는 예술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민간지원기관들을 네트워킹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거주지역이나 활동지역을 해당 차단체로 한정하고 그들 중 수월성에 입각하여 선정된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 지역의 아마추어, 동호회, 일반 시민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민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일정 몫을 할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관광부   |
|---|---|
|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 -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시행<br>- 문화예술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br>-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설치, 지도·감독 및 평가<br>- 문화예술 관련 시설 확충, 운영 지원, 평가             |
| 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
| - 활동거점 지역 및 발표 지역을 한정하지 않으며<br>- 지원 신청한 사업의 수월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br>- 지역 및 민간 부문 지원기구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 - 해당 지역에 활동거점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공연, 전시, 상영하고자 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로 한정하며<br>- 해당 지역의 아마추어, 동호회, 일반시민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

〈표-1〉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간 역할분담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전경

마지막으로 이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화산업이라 불리는 대중예술 장르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포함할 것인가이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금들, 문화산업기금, 방송기금, 영화진흥기금, 출판진흥기금 등에서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영화진흥위원회만이 독립영화를 육성하고 있는데 다른 지원기관들이 이를 지원사업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독립음반, 독립만화 등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은 궁색한 뒷방 신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패러다임이 설득력을 얻어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금들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 편입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공공-영리 영역

다음으로 공공-영리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예술산업이다. 이 부분은 새 예술정책에서 논의는 되었으나 예술정책 내에서 아직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공연기획사, 화랑, 예술잡지사, 예술출판사 등이다. 이들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법적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실제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예진흥원이 융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화예술 관련 방송영상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화, 멀티미디어 콘

텐츠 등의 제작에 대한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예술가, 예술사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방송영상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 CD-Rom 등이 있는가? 제대로 된 출판물도 없는 현실에서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하겠으나 방송통신융합으로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제작 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새롭고 중요한 장을 준비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3) 민간비영리

다음으로 영역 ③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문예진흥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건부기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인 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해 예를 들면, 영국에서 운영하는 Pairing Scheme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을 처음 지원한 기업에게 문예진흥원이 매칭펀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업의 범주 구분

### 1) 장르

사업의 구분은 기관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예술 장르간의 매트릭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동안 문예진흥원의 사업범주 구분방식은 목표와 장르 중에서 목표를 일차적인 구분방식으로 삼아왔다. 목표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게 되면 같은 사업명 아래에서 다양한 장르의 사업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예술 장르의 차이에서 오는 지원사업의 특성화, 장르별 발전 단계의 차이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 예술계가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총량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소위원회가 장르 중심으로 가게 될 경우 나중에 사업정리는 목표에 따라 하게 되더라도 장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사업범주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장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사업범주 구분이 이루어질 경우, 각 장르별로 예술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칫 장르 이기주의로 발전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것은 문예진흥원이 그 동안 전제로 삼고 있었던 장르의 구분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가이다. 그 동안 장르의 구분방식은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문화일반, 기타 등으로 구분해 왔다. 여기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술은 시각예술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은 시각문화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다른 장르에 비해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디오아트, 미디어아트 등으로 장르의 확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시각예술 분야에는 회화, 조각 외에 건축, 디자인, 공예 부분이 포괄된다. 이를 미술이라는 용어로 한정할 경우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연극, 무용, 음악이다. 이들은 공연예술로 통칭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들 각각의 장르별 지원금액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이들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매개 영역으로 볼 때, 공연장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각 장르의 특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연예술 분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통예술이라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실제로는 국악을 말하는데 전통예술은 장르라기보다는 시기를 축으로 설정된 분야라는 점에서 만약 이 부분을 설정하려면 전통미술 분야—서예, 전통공예 부분이나 전통문학 분야—시조, 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원예술과 문화일반에 대한 것이다. 문화일반에는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향수나 평론가 등의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원예술은 정형화된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예술, 지하철에서의 문화공연,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축제를 포함하여 복합예술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외에 모든 장르에 공통된 것으로서 직접 창작을 하지 않는 매개 영역에 속하면서 예술의 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론 부분이다. 평론이 주로 유통되는 경로는 글을 통해서이므로 잡지, 출판 등과도 연계가 있고 평론의 근간이 되는 예술 관련 이론, 학술연구 부분을 포괄하게 된다. 또한 평론가들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큐

레이터들이 평론가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술평론 부분의 신설은 매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평론가, 언론인에 대한 지원에 중요한 계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예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 예술계의 건강한 발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창작·매개·향수의 선순환 구조 고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목표의 설정에 대해 살펴보자. 창작 촉진, 유통 확대, 향수 제고 등이 그 동안 우리가 사용해 온 일반적인 목표 설정방식이다. 이는 예술작품의 생산-유통-소비 프로세스를 구분한 데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이 프로세스가 늘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공급에서 시작하여 소비로 끝난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문화예술계는 늘 공급과잉이고 시장은 협소할 뿐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라고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을 향수하는 국민은 별반 늘어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하는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화의 민주화가 갖는 이념적 한계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낳으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최우선 순위를 갖게 되었다.

문화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대체한 문화민주주의는 시민을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로 본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이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예술의 수월성이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창작이나 향수나 이원론에 입각하여 양자택일을 했다는 점이다. 양자간의 역동적인 선순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영향은 그대로 문예진흥원 지원 사업에도 반영되어 2000년도부터는 창작활동 지원예산보다 향수기회 확대 사업예산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편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예술가는 관객과 시장을 찾지 못하고 국민은 자신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불균형을 상생적인 순환구조로 재편될 수 있는 계

우리나라의 예술가, 예술사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방송영상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 CD-Rom 등이 있는가? 방송통신융합으로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제작 지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새롭고 중요한 장을 준비하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Culture Democracy

기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장기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 (2) 작품의 종 다양성 확대, (3)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심화. 이들은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전제로 도출한 것이다. 즉 원편이 현 단계 예술계의 구조라면, 오른쪽에 그린 미래 예술계의 구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를 지원사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는 지역 수준을 전국 수준으로, 전국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높이는 넓은 저변의 힘에서 받쳐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작품의 종 다양성 확대에 의해서 달성된다. 전통·현대, 기존 장르·새로운 장르, 기초예술·대중예술, 한국예술·외국예술 등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 제고와 다른 별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 확대 및 심화는 다이어그램 상에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잠재인구를 문화예술 향수계층으로 만드는 것, 단순 향수자를 애호가로 만드는 것, 애호가를 직접 표현하고 창작하는 아마추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마추어에서 매니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매니아를 준전문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등 보다 세부적인 하위 목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것은 참여의 수준을 인지, 감상, 학습, 표현, 창조의 단계로 심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가 심화될수록 문화예술계의 고정 관객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관객이 많아지게 된다. 그 동안 향수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은 향수자 층을 평면적으로 정태적으로 파악

했다는 것이다. 계층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구조 설계에서 더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계층이 아니라 향수 및 표현 능력의 수준 차이이다. 그리고 향수 및 표현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때, 창작자와 향수자는 양분되고 대립되는 항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원사업은 구조적으로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미참여·잠재인구를 참여하게 하는 사업 (2) 취미·아마추어·동호회를 활성화하는 사업 (3) 예술가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 (4) 신진 예술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5) 기성 예술가가 역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사업.

### 3) 지원대상의 특성에 따른 지원방법의 다원화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먼저 선결되었을 때,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지원방법에서의 해묵은 대립—소액다건이 좋은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좋은가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지원대상의 세분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수월성에 입각하여 그린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액다건이 중요하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로 올라갈수록 수월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때문이다.



둘째, 매개지원과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창작이나 향수나라는 이원론은 실제 작품이 만들어지고 시민에게 전달되는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사실상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앞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지원방법 상에서 반영하면 창작과 향수가 서로 만나는 매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매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문학에서 잡지사를 지원하는 사례를 통해 이미 실패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즉 잡지사에서 작가들에게 원고료를 지불하도록 하다보니 작가들이 잡지사에 매이게 되고 정작 창작지원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안공간 지원사업'이었다.

대안공간 지원사업을 지원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공간들에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대안공간에서는 공모를 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에 맞는 작가를 선정하여 무료 대관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품 제작비 지원이나 카탈로그 제작을 해주었다. 대안공간은 풀, 루프, 사투비아 다방 등 각각 예술적 가치 지향이 다양한 곳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작가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들 공간을 중심으로 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되었다. 또한 각 공간에서 특성화된 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공간 활성화와 향수 기회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작가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과 비슷한 대안공간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대한 불신이 적고 간단한 지원신청서와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이 적었다. 반면에 지원기금을 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안공간들에서 제대로 목적인 사업에 돈을 집행하였는가만 관리하면 되고 공공기관이 흔히 안게 되는 예술적 가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예술활동들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방법 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방법은 대안공간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공연장으로 확장되었을 때,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활성화와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문화공간들은 창작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 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품제작비 외에 장비 지원, 공간 지원 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창작지원에도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원방법은 문예진흥원이 모기금을 갖고 작은 민간재단들을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데 우리나라처럼 민간재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장비 지원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자칫 장비 지원을 잘못 생각하면 문예진흥원이 작가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장비들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예술의 매체 활용이 매우 다각화되고 장비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는 특성화된 공간들이 장비를 구비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실제 장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공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디어액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비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장비를 임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을 작가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그 동안 문예진흥원은 지원 신청을 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지원신청서가 요구하는 행정적 부담과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등이 겹쳐 공모 자체에 불응하는 현상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굴지원 또는 사후지원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발굴지원에 관해 살펴보면, 필자의 견해로는 문예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문화시설들 - 마로니에미술관, 인사미술공간, 예술극장, 유니베르시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예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은 그 동안 공간대여가 주요한 지원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많은 문화시설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원방법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화시설들은 더 이상 공간대여 기구가 아니라 발굴지원 기구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굴지원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문예진흥원 직원이 관장

이 되고 매우 소수의 전문가가 그것도 임시직으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발굴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의 관장들을 전문성을 갖춘 예술계 인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스태프로 채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문예진흥원은 작년에 '올해의 예술상' 제도를 마련하여 사후지원방법을 처음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상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의 미숙함으로 인해 지난해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몇 명의 심사위원에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로 인해 시상제도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고 사후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도 전에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술계 전반에서 이루어진 한 해 실적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사전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년도 4/4분기부터 당해연도 3/4분기까지를 1년으로 잡고 이 기간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후보군이 공개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경쟁 속에서 4/4분기에 예술상이 수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넷째, 민간의 예술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방법의 도입이다. 현재 문예진흥원에서는 조건부기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가 개인에 대한 후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매칭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민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여건에서는 매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건부기부금제는 세제혜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사실 민간기부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기능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수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풀 자체를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기업메세나 협의회(Arts & Business)가 복권기금을 가지고 처음 예술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Pairing Scheme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

를 문예진흥원과 기업메세나협의회가 공동 운영한다면 기업메세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지원제도와 융자지원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단년도 지원이 갖는 한계 때문에 그 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원심의회에 대한 신뢰와 기금 규모에서의 여유가 일정 정도 확보되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융자지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사실상 예술계에는 화랑, 공연기획사, 잡지사, 출판사 등 그 자체로는 영리적인 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예술시장의 문제에 대해 문예진흥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문예진흥기금에서 예술시장의 문제를 논외로 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나라의 예술시장에 대한 정책은 문화관광부 예술국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이것은 예술시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료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에 문화산업 관련 기금들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기업들에 대해 융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술시장을 구성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고리는 역시 문예진흥기금의 총량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즉 현재와 같이 기금의 총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예술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나 예술시장이 어려운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예술계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융자지원제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문예진흥원과 예술국이 공히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